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1. 30.(화)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복지부 재정 일자리사업 진행상황 점검 위한 시도회의 개최 -
- 연간 목표 일자리 수 117만 개 중 97% 이상 상반기 중 신속 모집 독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차관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복지 분야 재정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job리를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하였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하였다.

<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

(단위: 백만 원, 명)

사업명	'23년		'24년		비고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노인일자리	1,531,690	883,000	2,017,628	1,030,000	+4859억 원 +147천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01,981	36,524	546,105	38,959	+441억 원 +2.4천 명
자활사업(자활근로)	609,393	66,000	659,462	69,000	+501억 원 +3천 명
장애인일자리 지원	207,299	29,546	222,695	31,546	+154억 원 +2천 명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 차관은 “일자리 사업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민생안정사업, 각종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17개 사업(총 61조 규모)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 중”이며, “직접 국민들에게 현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재정일자리 신속집행 시도 국장 회의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박창규 (044-202-2320)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02-2334)



□ **회의 개요**

- (추진배경)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사업의 신속집행 관련 추진사항 점검
- (일시) 2024. 1. 30.(화) 10:30~11:30
- (장소) 서울 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21F) *세종 1차관실 회의실, 시도 영상연결
- (참석) (복지부) 제1차관(주재), 기획조정실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및 일자리 담당 국장, (지자체) 17개 시도 복지국장

□ **논의 사항**

- 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계획 및 실적
- 일자리 신속집행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0:30~10:35(5')	■ 모두말씀	복지부 제1차관
10:35~10:40(5')	■ 복지부 일자리사업 개요 설명	사회서비스정책관
10:40~10:55(15')	■ 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	담당국장
10:55~11:25(30')	■ 시도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복지부 제1차관 시도국장
11:25~11:30(5')	■ 마무리 말씀	복지부 제1차관